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 (이재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7
----------	-------

제출년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이재복, 한명훈, 현옥순,
박은정, 안두희, 이상우,
백승희, 최찬규, 김태성,
염정우 의원(10인)

1. 주 문

- 정부는 과도한 대출규제와 고금리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출규제 즉각 철폐 및 담보가치 중심 시사 전환,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하, 연관 사업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현재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소비 위축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임.
-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된 획일적인 대출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함에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음.
-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및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단순

한 지원이나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중개업을 비롯해 건설·인테리어·설비업, 금융업, 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연관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골목상권의 침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조차 주택과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LTV·DTI·DSR 등 각종 대출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는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끊기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관망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거래감소는 주택시장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여, 지역경제 전체가 함께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고금리와 대출규제는 주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비쿠폰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나 임시방편만으로는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 소비를 회복시키며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주택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야 건설과 인테리어, 금융과 이사업 등 관련 산업이 회복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며, 궁극적으로 민생경제에도 다시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민생 중심의 정책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LTV · DTI · DSR 등의 대출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심사하라!

하나, 정부는 기준금리를 최소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6. 9. 1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